

광주·전남 학교 10곳 중 8곳 스프링클러가 없다

과학실·조리실 건물조차 설치 안돼 화재 사각지대 방치 전국 평균 33% 보다 낮아...6층 이상 건물만 설치 규정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 화재 예방의 최소 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유치원·특수학교·초·중·고(사립유치원, 국립 유치원·초·중학교 제외) 316곳 중 25%인 81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전남 역시 지역 867곳 학교 중 24%인 214개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학교별 설치율은 ▲세종 75.5% ▲울산 52% ▲경기 48.4% ▲인천 42.9% ▲서울 40.7% ▲대구 38.3% ▲부산 35% ▲대전 33.1% ▲전북 27% ▲충남 27% ▲광주 25.6% ▲경남 25.6% ▲

전남 24.7% ▲경북 22.8% ▲제주 22.3% ▲충북 22% ▲강원 14.2% 등의 순으로, 세종과 울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광주와 전남은 26%에도 못 미치는 하위권에 속했다.

특히 과학실(실험실)과 조리실을 별도의 건물에 두고 있는 대규모 학교마저도 대다수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화기 사용이 많아 위험이 높은 과학실 등을 별도의 건물에 두고 있는 전국 155개교는 모두 해당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조리실이 별도로 있는 건물 역시 73개동 중 72개동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 과학실과 조리실 등 화재 취약지역만이라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은 학교 시설물에 대해 6층 이상이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층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현장의 화재 안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고층 건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6층 이상만 의무화하는 것은 과학실·조리실 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내 화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안전관리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접수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16일까지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주소지가 광산·남·서구인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생)으로, 대안학교·홈스쿨링·국제학교 등에 다니거나 학교를 유예한 아동이다. 지난 달 28일 기준 국의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아동은 제외된다.

학교 밖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생)에게는 아동특별지원금으로 20만 원, 학교 밖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생)에게는 비대면학습지원금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

제출서류는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예금주가 아동 혹은 보호자인 통장사본 등이다. 대리 신청 때는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제출서류 서식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억짜리 60평 관사에 관리비는 혈세로 전남 교육감 관사 '시대 역행'

이은주 의원 "구시대 유물"

전국 교육감 아파트 관사 중에서 전남도교육감의 관사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관리비조차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7곳의 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광주에서 무안으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당시 시세 5억원 상당의 201.14㎡(60평)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해 관사로 쓰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191.55㎡(57평, 3억원), 전북도교육청은 186.21㎡(56평, 4억 4000만원), 강원도교육청은 159.66㎡(48평, 3억 1000만

원), 충남도교육청은 114.89㎡(34평, 2억 4000만원)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 중이다.

이에반해 경남과 경기도는 각각 단독주택 관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광주 등 10곳의 교육청은 관사를 보유하지 않았다. 현재 관사를 보유하지 않은 교육청 대부분은 기존 관사를 매각하거나 청소년 공간으로 전환했다.

관사 운영비의 형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직원용 관사는 실거주자가 자비로 감당하는 반면, 교육감 관사는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고위직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들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고위직을 우대하는 조례와 관행 자체가 문제"라며 "당장 관사를 없애지 않더라도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호남대, 내일 AI산업 응용 워크숍...국내 석학 대거 참여

'AI특성화대학' 호남대학교가 국내 AI 석학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나 교통정보 등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조망해보는 AI산업응용 워크숍을 마련했다.

호남대 AI빅데이터연구소는 4차산업혁명 선도형 신대학사업단과 함께 16일 오후 2시 교수학습개발원

에서 'AI기술의 산업현장을 가다'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유튜브 '호남대TV'로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고병열 박사(KISTI 미래기술 분석센터장)의 '데이터분석으로 미래유망 선도기술을 찾다', 김승만 박사(LG전자 CTO, A&B센터스마트 모빌리티 연구소 Cabin HMI TP 팀장)의 'AI

응용사례: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전태균 박사(SI-Analytics 대표이사)의 '인공위성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교통정보 응용사례'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호남대 AI빅데이터연구소는 지난 8월 27일 'AI(인공지능) 워크숍'을 열어 AI시대 대학교육의 미래비전과 교육현장에서 향후 추진할 방향성을 제시했고, 9월 18일에는 '빅데이터 워크숍'을 마련해 빅데이터의 다양한 현장 응용사례를 선보였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5·18기념재단 "태국 민주화운동 지지한다"

'광주인권상' 자투팻 체포 규탄

5·18기념재단이 태국 젊은이들의 민주화 열망에 연대와 지지를 표하고, 최근 민주화운동 관련 태국 경찰의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자투팻(Jatupat Boonpattaraksa·사진) 등의 체포를 규탄했다.

14일 5·18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2017년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자투팻을 비롯한 21명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시위자들은 태국 경찰에 체포됐다"면서 "태국의 민주화운동에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하고, 체포된 시위대들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념재단은 "특히 1973년 10월14일은 라자담년 대로에서 시민들은 단지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고 체포된 태국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날"이라면서 "오늘 태국의 젊은이들은 다시 거리로 돌아와 힘 리본과 세손가락 경례를 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망의 몸짓으로,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젊은이들을 소환하고 있다"고 강조



(5·18기념재단 제공)

했다.

한편, 태국에서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제3야당 '퓨처포워드당'(FPP)을 해산시킨 뒤 반정부 집회가 일어나는 등 태국 정부는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태국 시민들은 지난달 시민 10만명이 수도 방콕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반정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개구리 모양 햄버거 만들었어요
광주 동구 산수1동 행정복지센터는 13일 지역아동센터 직원 및 어린이들과 함께 개구리 모양의 햄버거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행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에게 좋은 간식을 만들어 나눠줄 계획이다. <광주 동구 제공>